

노무현의 승자독식형 자본주의 대항담론 : 사회적 자본과 화해정치*

박 찬 승**

• 요 약 •

이 연구는 사회적 자본을 증대시키기 위한 전략으로서 노무현의 화해정치가 활용되었다는 걸 밝힌다. 노무현의 화해정치를 통한 사회적 자본 증대 정치는 승자독식형 자본주의 대항담론으로서 큰 의미가 있다. 특히 정치영역에서 정치개혁과 연합정치를 통해 구현된다는 점을 밝힌다. 정치개혁에서는 당정분리와 선거공영제를 통해, 연합정치에서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간 연정 시도를 통해 노무현의 화해정치가 이루어진다. 화해정치의 핵심 담론은 연대, 협력, 통합이다. 이러한 노무현의 화해정치는 역사 재구성의 관점에서 수행된다. 또한 정치영역에서 노무현의 화해정치는 특정 영역에만 국한되는 게 아닌 사회영역으로까지 파급된다. 노무현의 화해정치는 각 영역마다 다른 정치 행위를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노무현이 정치개혁을 추진할 때, 규제 중심의 선거 관련 입법으로 선거운동이 경색되어 선거 후보자와 유권자 간 만남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있다. 또한 한나라당과의 연합정치 시도 역시 정무적인 뒷받침 없이 이상주의적 정치구상으로만 끝났다. 그러나 이를 계기로 한국에 선거공영제가 정착되고 이전보다 정치 문화가 선진적으로 변한 것은 의미가 있다. 오늘날 승자독식형 자본주의 담론이 계속 강화되고, AI 인공지능과 SNS의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경제 수준의 양극화와 보통 사람들의 확증편향이 강화된 모습이 보인다. 이 시기 승자독식형 자본주의 대항담론의 성격을 지니는 노무현의 화해정치를 통한 사회적 자본 증대 정치는 학술적 의미가 있다.

주제어 : 노무현, 화해정치, 진보·화해 담론, 사회적 자본, 승자독식형 자본주의

* 이 논문은 “박찬승, 『노무현의 화해정치』, 영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24”에서 “정치영역에서의 화해정치”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 영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객원교수.

I. 문제제기

한국은 1997년 IMF 이후 자본주의 담론 중심으로 사회 전반이 재구성되었다. 소득격차가 확대되고, 임시·일용직·계약직·파견 근로 등 비정규직 근로자가 증가했다. 또한 인간·사회적 가치보다 물질주의적 가치가 강조된다. 이 과정을 통해 한국 사회 전체가 ‘경쟁’과 ‘이기심’의 논리가 강화되고, 불안의 요소가 증대되는 경향을 보인다. 한국 시민사회가 전반적으로 파편화되는 과정을 겪게 된 것이다.¹⁾ 이 위기는 이혼, 자살과 같은 여러 사회 부작용을 낳았다.²⁾ 또한 당시 비정규직 고용이 급속도로 늘어났다.³⁾ 그야말로 한국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국면을 맞이한 것이다.

위기를 기회로 활용한다는 말이 있듯, 1997년 당시 위기를 조금 더 유연하게 대처할 방법은 없었을까? 이미 IMF라는 국제금융기구에는 사회 부정의와 관련된 특성을 내재하고 있었다. 이러한 IMF의 내적 특성상 양극화와 편향적인 자본주의 담론이 강화될 수밖에 없었다. IMF의 부정의한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IMF는 차입국(借入國) 내 기득권층 중심으로 의견이 반영된다. 비기득권층들의 대표성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다. 비기득권층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지만, 그들이 받는 영향은 기득권층들에 비해서 크다. 지주형(2011)은 IMF의 부정적인 특성으로 위기 관리 비용의 사회적 불균등을 꼽는다. 그에 의하면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가장 먼저 큰 희생을 치른 것은 해고와 실직 경험을 겪어야 했던 노동자들이었다고 한다.⁴⁾

둘째, IMF는 세계 사람들로부터 정보 접근성이 낮다. 국제금융에 관한 것은 사람들로 부터 정보의 접근성이 매우 떨어진다. 소수 선진국 안에서 국제금융 전문가 정도만 관련 정보를 이해할 수 있다.⁵⁾ 김유은(2009)에 따르면 개도국, 선진국 대부분 시민의 경우 국제금융기관에 대한 접근과 통제가 불가능하다고 한다.⁶⁾ 결과적으로 국제금융 국제기구에

1) 심영희, “IMF시대의 청소년문제 양상과 과제-위험사회의 관점에서-”, 『청소년학연구』, 제5권 제3호, 한국청소년학회, 1998, pp.115-145; 이남철, “IMF체제 이후 한국 노동시장의 변화”, 『지역사회』, 겨울호 통권 제39호, 한국지역사회연구소, 2001, p.93, 127; 인후남·이제경, “IMF경제위기 직후 노동시장에 진입한 직장 남성의 진로구성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Andragogy Today』, 제18권 제3호, 한국성인교육학회, 2015, p.191 참조.

2) “[기자의 눈] 최영목/YS의 「공동책임론」”, 『동아일보』 1998년 5월 7일.

3) “범죄 늘고 가정까지 ‘구조조정’/고실업시대의 사회상”, 『한국일보』 1997년 12월 7일.

4) 지주형, 『한국 신자유주의의 기원과 형성』, 서울: 책세상, 2011, pp.105-106.

5) 김유은, “IMF 거버넌스에 있어 시민사회의 역할”, 『시민사회와 NGO』, 제7권 제2호, 한양대학교 제3센터연구소, 2009, p.327; Keohane, Robert. “Global Governance and Democratic Accountability”, Rorden Wilkinson ed. The Global Governance Reader. London and N.Y: Routledge, 2005, p.128.

서 정책 결정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소수 선진국이 주도한다.⁷⁾

이러한 IMF의 내적 특성에 따라 1997년 한국의 사회·경제 위기는 피할 수 없는 것이었다. 양극화와 계층 간 분열이라는 사회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었다. 더불어 한국은 도덕적 담론의 위기마저 불러오게 된다.

1997년 IMF를 기점으로 한국은 시장 권력을 중심으로 한 기득 세력이 사회 전반을 주도하게 됐다. 경제 수준을 중심으로 상층과 하층의 양극화는 견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됐다. 이것을 한국과 미국 중심 기득·상층 집단의 헤게모니 전략이 성공한 것으로 본 의견도 있다.⁸⁾ 이 논의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 보인다. 특히 한국의 경제체제를 결정짓는 과정에서 다수의 국민이 배제됐다. IMF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가 기존의 한국 사회·경제 주류 흐름을 바꿀 뿐만 아니라 국가체제와 정책이 결정되는 정치 과정에서도 충분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됐다.⁹⁾ 이러한 과정을 통해 경제영역에서 ‘경쟁’ 담론은 한국 사회의 주류 담론으로 자리매김했다.

IMF 위기는 한국의 도덕적 토대를 떠받치고 있던 진보적 사회단체들에서도 큰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먼저 노조의 지도부와 노동자 대부분이 ‘방어적 협조주의’로 선회하는 전략을 선택하게 됐다. 당시 노동자와 노조들이 재벌에 대해 정리하고 반대 투쟁을 전개했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했다.¹⁰⁾ 한편 1990년대 중후반 시기로 접어들면서 진보적 학생운동 세력 역시 급격하게 약해졌다. 한국의 학생운동은 현대 역사에서 진보적 담론을 주도적으로 이끄는 중추 세력이었다.¹¹⁾ 이들은 노동운동과도 긴밀히 연계하며, 사회운동을 펼쳐나갔다. 한국 사회에서 진보 담론 생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던 노동·학생 중심 세력이 노선 변경과 쇠퇴의 길을 걸으면서 사회단체들의 활동력과 범위는 약해지고 좁아졌다. 또한 이들은 진보 정치세력을 뒷받침하는 사회 세력들이었다. IMF 위기가 진보 담론의 위기를 동시에 불러오면서 신자유주의에 대항할 수 있는 토대가 무너진 것이다.¹²⁾ 승

6) 위의 논문, p.327.

7) 위의 논문, p.319.

8) 지주형, 앞의 책, p.185, 225.

9) 이는 당시 한국의 경제관료들이 미국보다도 국내 노동유연화를 더 적극 도입하려고 한 것과 경제 위기를 계기로 국가 체질을 완전히 바꾸려는 모습을 통해 추론할 수 있다(위의 책, p.225, 237; 최국희, 『국가부도의 날』, 장르: 드라마, 배급사: CJ ENM, 개봉: 2018년 11월 28일, 상영시간: 114분, 참조).

10) 지주형, 앞의 책, p.311.

11) 김도중, “한국학생운동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NGO연구』, 제2권 제1호, 한국NGO학회, 2004, p. 219.

12) 1997년 이후 2004년 민주노동당의 제도권 진출과 성장이 있었고, 가치 담론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모인 적이 있었다. 하지만 정치영역에서 그 의지를 담아내지 못하면서 진보정당의 힘은 다시 꺾였다. 이 시기도 우리 사회에서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에 대항하는 담론들이 충분히 성장한 시기라고 볼

자독식형 자본주의 담론¹³⁾이 대세를 이룰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것이다.

이 경향성은 오늘날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이라 불리는 AI 인공지능 발전과 맞물리면서 더욱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¹⁴⁾ 인공지능 시대에 가까이 다가설수록 빈부격차가 더욱 커지고, 상위 소수가 소유하는 부의 크기가 점점 더 늘어나게 됐다. 당분간은 이 대세적 흐름을 꺾기는 힘들 것이다. 국가의 장기적 미래와 인간 가치의 담론 구성에 중요한 부분인 교육과 지도자의 영역도 자본주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 국가 교육정책은 1퍼센트의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시스템이고, 99퍼센트의 사람은 잉여로 분류된다고 논의되기도 한다.¹⁵⁾ 게다가 정치·사회의 가치 담론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치인들 역시 자본주의적 양식을 따르고 있다.¹⁶⁾ 결국 한국은 화해·통합의 담론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 이렇게 승자독식형 자본주의 담론이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길은 무엇일까? 혹은 국가 차원에서 어떻게 사람들 간 협력과 상호작용을 증가시켜 여러 의미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을까?

이 연구는 사람들 간 관계, 협력, 연대의 의미를 강조하는 사회적 자본이 자본주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이 연구에서 한국의 정치 지도자였던 노무현의 화해정치를 통한 사회적 자본 증대 정치를 통해 승자독식형 자본주의 대항담론을

수는 없다(김수정·김성문, “진보정당에 관한 신문기사의 경향성 분석”, 『사회과학연구』, 제21집 1호,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5, p.62; 지병근, “한국진보정당의 조직, 이념, 그리고 지지기반”, 『현대정치연구』, 제7권 제1호,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2014, p.17, 34, 참조).

13) 이 연구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의식은 한국의 ‘승자독식형’ 자본주의이다. 단순히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게 아니다. 시장영역에서 승자들 중심으로 이익이 독점되는 현상이 문제의식의 핵심이다. 이와 비슷하게 광정수 외는 한국은 시장의 규칙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는 천민자본주의(Parish Capitalism) 체제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이병천은 한국의 외환위기 이후 신축적체제 현상을 두고, 1등만 살아남는 승자독식 시스템이라고 한다. 이 연구는 이와 같이 한국 자본주의 체제의 문제를 의미하는 승자독식형 자본주의의 개념을 충분히 인용한다(광정수 외, 『한국경제 새판 짜기: 박정희 우상과 신자유주의 미신을 넘어서』, 서울: 미들하우스, 2007, p.29; 이병천,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축적체제: 수출주도 수익추구 축적체제의 특성과 저진로 함정”, 『동향과 전망』, 81호, 한국사회과학연구회, 2011, p.68).

14) 박일준, 『인공지능 시대, 인간을 묻다』, 서울: 동연, 2018, p.49; “20년 전 ‘힐튼 비디오’가 지금 나왔더라면”(칼럼), 『조선일보』 2024년 3월 5일, 참조.

15) 위의 책, p.49, pp.178-179.

16) 『한국 자본주의』에서 장하성은 정치영역에서 한국의 양당이 ‘정리로운 자본주의’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낮고, 제3당의 대안정당 출현이 어려울 것으로 본다. 현재는 2024년 총선 결과를 보듯, 여전히 양당의 강세는 유지되고, 한편 한국의 진보정당으로 불린 녹색정의당(녹색당과 정의당은 ‘선거연합’을 하였다)이 단 하나의 국회의원 의석도 얻지 못했다. 이전보다 한국 양당의 힘이 더 강해진 측면도 있다. 이 배경에는 정치영역에서 기득권 양당의 세를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한 ‘비례위성정당 창당’이 자리 잡고 있다. 한국의 정치영역에서 이러한 정치인들의 움직임은 연대와 협력을 통해 다양한 정치세력과 함께하기보다는 자본주의·신자유주의의 ‘경쟁’ 논리를 받아들인 결과로 보인다(장하성, 『한국 자본주의』, 성남: 헤이복스, 2014, p.595; “② 반복된 위성정당 꿈수...비례성 무너지고 양당 독점 더 심해져”, 『경향신문』 2024년 4월 23일; “[정동칼럼] 기후정치가 남긴 숙제”, 『경향신문』 2024년 5월 1일, 참조).

살펴본다.¹⁷⁾ 역대 한국 대통령 중 노무현은 사회적 자본에 대해 가장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¹⁸⁾ 이 행위의 주도 역할로 정치 지도자를 주목한 이유는, 이들이 국가에서 상징적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¹⁹⁾ 현실적으로 정치 지도자는 다른 국가 구성원과 비교해 담론 생산에 유리한 위치에 있다.²⁰⁾ 따라서 노무현의 화해정치를 통한 사회적 자본 증대 정치 분석은 우리가 어떻게 승자독식형 자본주의에 대항하는 담론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모색하는 데 도움 될 수 있다.

II. 개념 탐구 및 분석틀

1. 개념 탐구: 노무현의 사회적 자본과 화해정치

이 연구는 노무현의 승자독식형 자본주의의 대항담론을 분석하기 위해서 사회적 자본과 화해정치 개념을 탐구한다. 한 가지 짚을 것은 이 두 개념이 서로 상관관계로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노무현에게는 화해정치를 통해 사회적 자본 증대 정치가 이루어진다.²¹⁾ 노무현은 한국의 사회적 자본 축적 전제로 원칙, 신뢰, 투명, 대화와 타협을 꼽는다.²²⁾ 정치영역을 중심으로 한 노무현의 화해정치에서 핵심 구성요소는 ‘세력균형을 통한 화해’ 원칙과 대화와 타협의 정치다.²³⁾ 이러한 노무현의 사회적 자본과 화해정치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노무현은 사회 구성원들이 공동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추구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상호 조정과 협력을 촉진하는 사회를 사회적 자본이 풍부한 사회라고 보았다.²⁴⁾ 노무현에게 사회적 자본은 신뢰, 원칙, 규범을 지킬 수 있는 사회의 역량을 뜻하는 것이다.²⁵⁾ 이와 비슷한 논의로 로버트 D. 퍼트남(Robert D. Putnam, 2009)은 사회적 자본

17) 사회적 자본과 관련한 노무현의 화해정치는 자본주의의 대항담론으로 볼 수 있다(대통령비서실, 『노무현 대통령 연설문집 제4권』, 2007, p.570; 대통령비서실, 『2007년 신년연설: 대통령 연설문』, 2007a).

18)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n.d.), 기록물목록, <http://www.pa.go.kr/>(검색일: 2024.05.14).

19) 김학노, 『남과 북의 서로주체적 통합』, 서울: 사회평론아카데미, 2018, p.308.

20) 현재 한국은 사회영역에서 담론 생산이 미약하다(김정인, “한국 사회에서의 숙의민주주의의 제도화 가능성에 관한 연구: 일본 삿포로 시 제설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22권 제1호, 한국정책과학학회, 2018, p.2, 참조).

21) 박찬승, 『노무현의 화해정치』, 영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24, p.75.

22) 국정홍보비서관실, 『정책기획위원회 오찬연설 <민주주의론> 주제별 정리』, 2006.

23) 박찬승, 앞의 논문, p.39, 132.

24) 대통령비서실, 『벤처기업인을 위한 특강: 대통령 연설문』, 2007b.

을 개인들 사이의 연계와 이로부터 발생하는 사회적 네트워크, 호혜성과 신뢰의 규범이라고 보았다.²⁶⁾ 진미정 외(2009) 역시 사회적 자본을 개인과 개인 사이의 관계성에 기초한 자원이라고 한다.²⁷⁾ 삐에르 부르디외(Pierre Bourdieu, 2003)는 사회자본을 특정한 집단의 구성원이 되어 획득되는 실제적이고, 잠재적인 자원의 총합이라고 한다. 이 자본의 중요한 토대로 사람들 간의 지속적인 네트워크와 제도화된 관계를 언급한다.²⁸⁾ 노무현은 이와 같은 사회적 자본을 어떻게 축적할 것인지를 심도 있게 모색한다.²⁹⁾

사회적 자본을 조금 더 깊게 살펴보면, 연계형 사회적 자본과 결속형 사회적 자본으로 나눌 수 있다. 이 둘은 차이점이 있지만, 서로 연결되어 있는 특성을 띤다. 연계형 사회적 자본은 다양한 사람들 간의 연대를 통해 광범위한 정체성과 호혜성을 만들어 낼 수 있다. 퍼트남은 마크 그레노비터(Mark Granovetter)를 인용하며, 막연히 아는 사람과 나를 연계해주는 ‘약한’ 유대가 나와 매우 비슷한 친척이나 친한 친구들과 나를 연계해주는 ‘강한’ 유대보다 실제로 더 효과적이라고 한다.³⁰⁾ 결속형 사회적 자본은 개별적 호혜성을 강화하고 연대성을 동원하는 데 효과가 있다.³¹⁾ 자기 집단에 대한 강력한 충성심을 창출시키는 데 효과적이다. 반면 소속 집단 외부에 대해서는 강한 적대감을 만들어 낼 위험성도 있을 수 있다.³²⁾

이렇게 두 개념은 차이점이 있다. 하지만 퍼트남은 흑인 교회와 카톨릭 우애 단체 ‘콜럼버스의 기사단(Knights of Columbus)’, 인터넷 채팅 그룹 사례를 제시하며, 많은 집단이 어떤 사회적 차원에 따라 구성원들을 결속하는 동시에 다양한 구성원들을 서로 연계시키고 있다고 한다.³³⁾ 사회적 자본이 사회적 네트워크로 현실에 구현되는 데 있어, 결속과 연계 중 어느 하나로만 특징지어질 수 없는 듯하다. 노무현 역시도 화해정치를 통해 연계형 사회적 자본 형성을 시도하지만, 한편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결속형 사회적 자본 증진을 목표로 한다.³⁴⁾ 이를 종합한 아래 <그림 1>을 보자.

25) 앞의 연설문, 2007, p.354.

26) 퍼트남, 정승현 역, 『나 홀로 불링』, 서울: 페이퍼로드, 2009, p.17.

27) 진미정 외, 『탈북인의 사회관계망과 사회적 자본』, 서울: 학지사, 2009, p.17.

28) 부르디외, 유석춘 외 역, “자본의 형태”, 『사회자본-이론과 쟁점-』, 서울: 그린, 2003, p.75.

29) 대통령비서실, 『정책기획위원회 신규위원 위촉장 수여식 및 오찬: 재임중 대통령 발언록』,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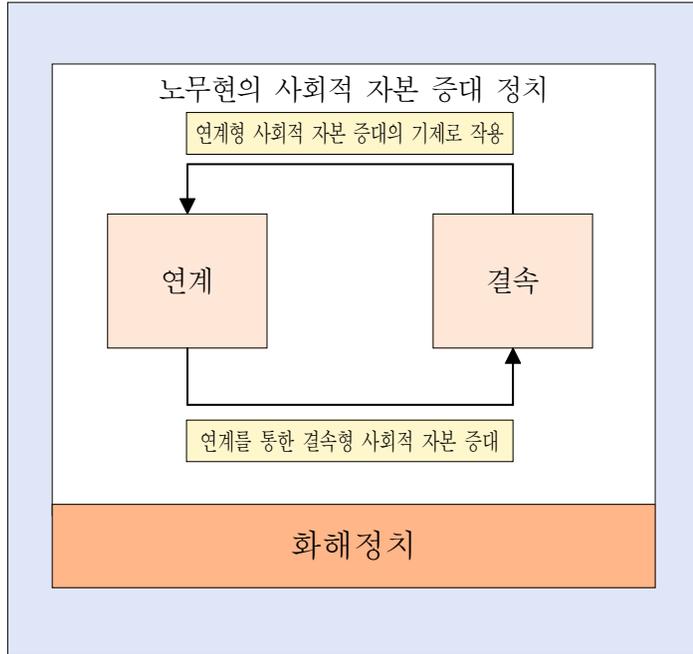
30) 퍼트남, 앞의 책, p.26.

31) 위의 책, p.26.

32) 위의 책, p.27.

33) 위의 책, pp.27-28.

34) 국정홍보비서관실, 앞의 보고서; 앞의 연설문, 2007b.



<그림 1> 노무현의 사회적 자본 증대 정치 작동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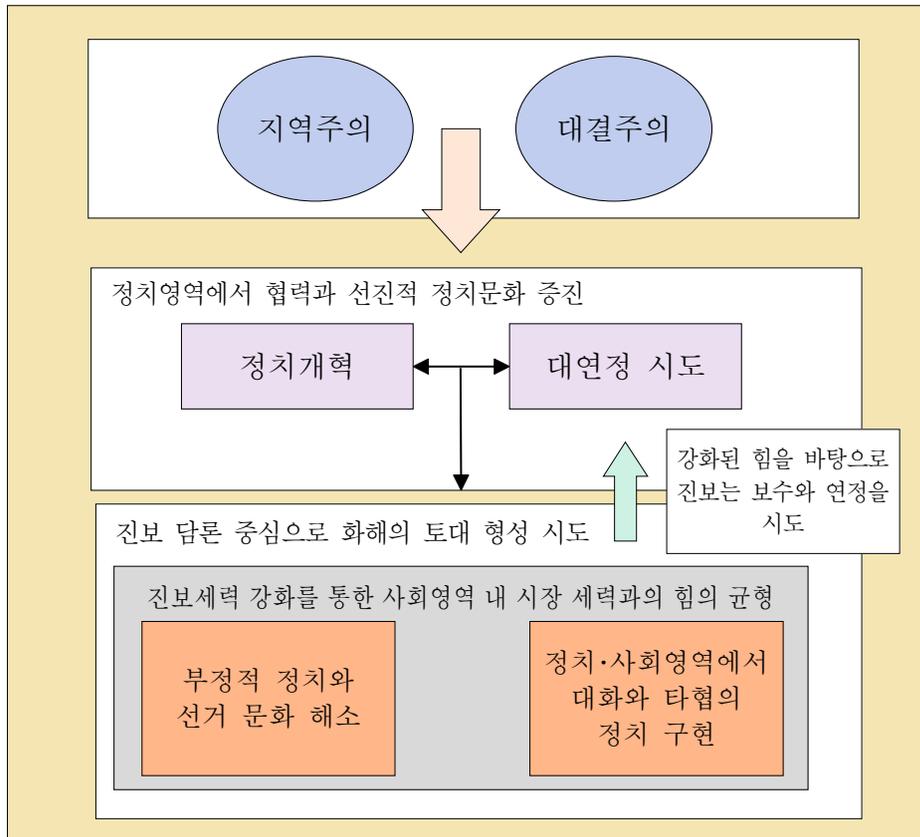
위 <그림-1> ‘노무현의 사회적 자본 증대 정치 작동 과정’에서 볼 수 있듯, 노무현의 사회적 자본 증대 정치는 화해정치의 뒷받침을 통해 수행되고, 연계형 사회적 자본과 결속형 사회적 자본의 의미가 함께 속한다. 연계를 통한 결속형 사회적 자본 증대는 다시 연계형 사회적 자본 증대의 기제로 작동되고, 이는 신뢰와 호혜성 증진을 통한 국가의 이익 도모로 이어진다.

노무현의 화해정치는 나와 대립을 이룬 상대와 갈등을 해소하고, 이전보다 더 나은 관계를 지향한다.³⁵⁾ 이를 위해 제도적 뒷받침이 수반된다. 노무현은 한국의 지역주의와 대결주의로 인해 정치영역에서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구현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또한 그는 한국의 사회영역이 시장권력에 의해 장악된 상태로 보았다.³⁶⁾ 그래서 노무현은 정치영역에서 진보 담론 생산을 통해 사회영역으로 영향이 파급되는 걸 기대했다. 그는 연합정치와 정치개혁을 통해 정치영역을 포함한 사회 전반이 바뀌는 상황을 생각했다. 노무현의 정치영역에서 화해정치는 대결정치와 대비됨과 동시에 사회 일반에 영향 미쳐,

35) 박찬승, 앞의 논문, p.188.

36) 위의 논문, p.26.

승자독식형 자본주의의 대항담론 성격을 지닌다. 노무현의 정치영역에서 화해정치 문제 의식과 실천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아래 <그림 2>와 같다.



출처: 위의 논문, p.132, 일부 수정.

<그림 2> 정치영역에서 노무현의 화해정치

위 <그림 2>에 나와 있듯, 정치영역에서 노무현의 화해정치는 하나의 영역에서만 국한되는 게 아니다. 사회영역과 충분히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는 정치영역에서 협력과 선진적 정치문화를 형성하고자 했다. 구체적으로 제도개혁을 중심으로 펼친 정치개혁과 연합정치를 통해 실천에 옮겼다. 동시에 사회영역에서도 과급효과를 기대했다. 이 지점에서 주목할 건, 노무현은 사회영역에 속한 진보세력과 시장권력 간의 힘 균형을 맞추려고 했다. 정치영역과 더불어 사회영역에서도 진보 담론 중심의 화해 토대를 형성하려고 했다. 가령, 노무현은 사회영역에서 강화된 진보의 힘을 바탕으로 정치영역에서 보수

와 대연정을 시도한다. 노무현의 화해정치는 정치영역에서 정치세력 간 협력의 영향이 사회영역에 파급되고, 사회영역에서 진보의 힘 강화가 정치영역에 영향 미친다. 이를 통해 노무현의 화해정치 선행 요건 중 하나로 세력 간 힘의 균형이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노무현의 화해정치는 사회적 자본 증대 정치의 전략으로 활용된다.³⁷⁾ 이는 아래 <그림 3>을 통해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2. 분석들

노무현은 사회적 자본 축적을 통해 화해·진보 담론 확장과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이 작동되기를 원했다. 궁극적으로는 깨어있는 시민이 국가를 주도하기를 지향했다.³⁸⁾ 이를 통해 그는 정치영역에서 파급된 효과로 사회영역에서 화해의 토대를 형성하려고 했다. 한편으로 노무현은 한국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 관련한 논리를 일방적으로 거부하기보다는 발전적으로 수용하려고 했다.³⁹⁾ 노무현에게는 승자독식형 자본주의가 큰 문제의식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⁴⁰⁾ 따라서 노무현의 승자독식형 자본주의의 대항담론은 자본주의를 후퇴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자본의 가치를 내재시켜 이전보다 나은 자본주의를 만들려고 한 것으로 볼 수 있다.⁴¹⁾ 그는 우호적 갈등 관계를 통해 성과를 만드는 정치를 선호했다. 이와 관련한 아래 분석들 <그림 3>을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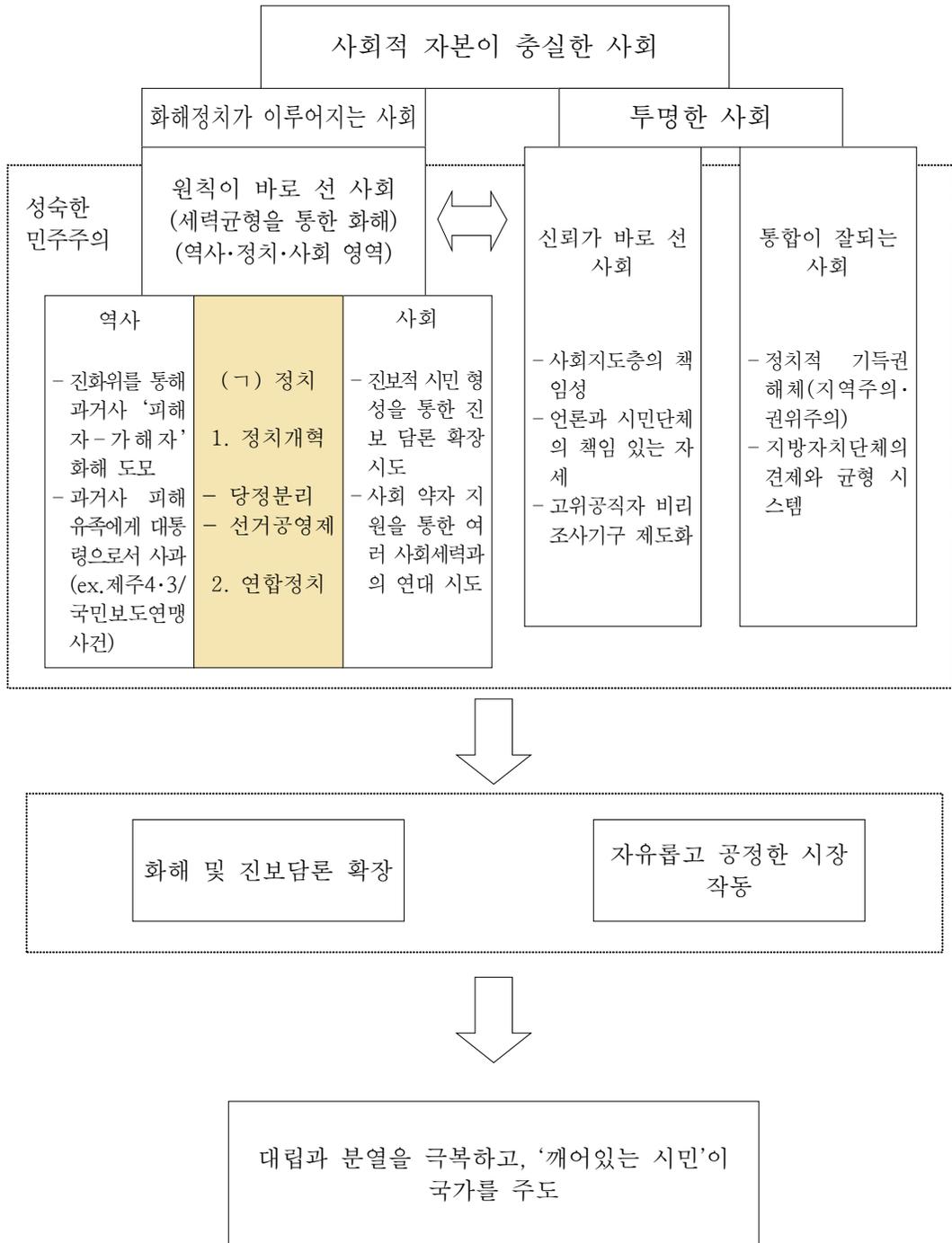
37) 노무현의 사회적 자본과 화해정치는 의미가 통하는 부분이 많다. 사회적 자본과 화해정치를 함께 포괄한 의미의 표현은 “우호적 갈등 관계와 상호정책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성과를 만들어내는 정치”다(앞의 연설문, 2007b).

38) 박찬승, 앞의 논문, p.185 참조.

39) 대통령비서실, 『진보 진영 내 논쟁에 관한 기고문-대한민국 진보, 달라져야 합니다: 대통령 연설문, 2007c.』

40) “노무현 대통령은 한국 사회가 효율만 내세운 경쟁 만능, 승자독식의 사회로 치달기보다는, 더불어 함께 가는 가치가 사회에 널리 퍼지기를 원했던 것이다.”, (변양균, 『노무현 따뜻한 경제학』, 서울: 바다출판사, 2012, p.160).

41) 일반적으로 ‘대항’이라는 의미에서 상대와 함께 발전한다는 의미를 생각하기 어렵다. 하지만 무페는 좌파들의 대항 정치 행위를 통해 자유주의 체제하에 민주주의가 이전보다 발전할 수 있다고 본다. 무페의 대항 헤게모니 정치 행위는 정치 공간 안에서 경쟁적 대결을 강조한다. 따라서 무페는 자유주의 국가의 특성으로 나타나는 대의제를 거부하지 않는다. 오히려 대의제에 적극적 ‘참여’를 통해 정치세력 간 서로 경합을 벌여야 한다고 논한다. 이 경우에 민주주의가 급진화를 이룰 수 있다고 본다. 이를 볼 때, 무페의 대항 정치는 세력균형을 통한 정치와 비슷한 맥락으로 파악할 수 있다. 나와 다른 상대가 상호작용을 해 큰 대아(大我)를 만들어 공동체를 발전시킨다는 의미가 있다(샹탈 무페(Chantal Mouffe), 이승원 역, 『좌파 포퓰리즘 위하여』, 서울: 문학세계사, 2019, pp.79-80, 106-107, p.91, 참조).



<그림 3> 분석틀: 노무현의 화해정치를 통한 사회적 자본 증대 정치

위 <그림 3>에서 보듯, 노무현의 사회적 자본 증대 정치전략으로서 화해정치가 활용된다. 노무현에게 사회적 자본이 충실한 사회는 투명한 사회이면서 화해정치가 이루어지는 사회다. 투명한 사회는 신뢰가 바로 선 사회와 통합이 잘 되는 사회다. 화해정치가 이루어지는 사회는 원칙이 바로 선 사회가 뒷받침한다.⁴²⁾ 신뢰가 바로 선 사회에는 사회지도층의 책임성, 언론과 시민단체의 책임 있는 자세, 고위공직자 비리조사기구 제도화가 포함된다. 통합이 잘 되는 사회는 지역주의와 권위주의를 중심으로 한 정치적 기득권의 해체, 지방자치단체의 견제와 균형 시스템이 포함된다. 또한 화해정치를 뒷받침하는 원칙이 바로 선 사회의 경우 ‘세력균형을 통한 화해’가 전제된다. 노무현은 역사·정치·사회영역에서 세력균형을 통한 화해로 사회적 자본 증대 정치전략을 펼쳐나간다.

이 연구는 노무현의 정치영역에서 화해정치를 통한 사회적 자본 증대 시도를 <그림 3> ‘(ㄱ) 정치’에 초점 맞추어 살펴본다. 정치영역에서 화해정치의 경우 정치세력 간 연대를 도모하고, 상호 이익을 증가시키는 행위를 시도한다. 특히 노무현은 정치개혁과 연합정치 중심의 정치 행위를 펼쳐나간다.

노무현의 화해정치는 사회적 자본 증대 정치전략으로 눈여겨볼 만하다. 퍼트넘은 사회자본은 효과적인 공공정책에 대한 대안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그 정책에 따른 결과라고 한다.⁴³⁾ 노무현은 정치·사회 영역에서 보수·시장 권력에 비해 진보세력의 힘이 약하다고 보았다. 그는 화해정치를 통해 정치·사회 영역에서 진보 담론에 속하는 연대, 통합, 화해담론을 강화하려고 했다.⁴⁴⁾ 이는 정치영역에서 대립과 분열 극복이 수월히 되게 하고, 사회의 신뢰와 연대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다. 노무현은 이를 통해 보수·시장 권력과의 힘 균형을 이루려고 했다. 이러한 노무현의 세력균형을 전제로 한 화해정치는 사회적 자본을 증대시키는 전략으로 의미가 있다.

이 지점에서 한 가지 짚을 것은, 노무현은 사회적 자본 증대의 전략으로 화해정치가 수행되기 이전에 성숙한 민주주의가 자리 잡아야 한다고 보았다.⁴⁵⁾ 그에게 성숙한 민주주의는 87년 형식적 민주주의 체제를 뛰어넘는 것이다. 노무현은 민주주의 개념 안에 관용의 문화를 내재시켜 생각하려고 했다.⁴⁶⁾ 관용의 문화가 포함된 성숙한 민주주의는 상

42) 국정홍보비서관실, 앞의 보고서: 대통령비서실, 『노무현 대통령 연설문집 제5권』, 2008, pp.134-135.

43) 퍼트넘, 유석춘 외 역, “번영하는 공동체: 사회자본과 공공생활”, 『사회자본-이론과 쟁점-』, 서울: 그린, 2003, p.139.

44) 박찬승, 앞의 논문, p.132, 185.

45) 앞의 연설문, 2008, pp.233-234.

46) 대통령비서실, 『참여정부 평가포럼 강연: 대통령 연설문』, 2007d: 대통령비서실, 『6·10민주항쟁 20주년 기념사: 대통령 연설문』, 2007e.

대의 생각이 옳을 수도 있다는 원리를 인정하는 것, 대화와 타협으로 서로 설득하고 의견을 모으는 것, 양보와 타협을 통해 이익을 서로 교환하는 것을 의미한다.⁴⁷⁾ 이러한 성숙한 민주주의가 수행될 때, 노무현은 사람들 간 신뢰를 중심으로 원활한 인간관계가 형성될 것으로 보았다. 그래서 위 〈그림 3〉에 나와 있듯, 성숙한 민주주의는 화해정치가 이루어지는 사회와 투명한 사회 저변에 있다.

III. 화해정치를 통한 사회적 자본 증대 정치

1. 정치개혁: 대결주의 담론 재구성

노무현은 정치영역에서 지역주의를 기반으로 한 대결주의 정치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정치세력 간 극단적 대결을 통한 경쟁은 대립과 분열을 키우게 된다고 보았다. 이 대결은 생산적인 정치 수행에 심각한 장애가 된다는 것이었다. 특히 그는 정치영역에서 정치 지도자들의 행위에 대해 상징적 의미를 강하게 부여했다.⁴⁸⁾ 지도자들의 분열적 행위는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본 것이다. 한편으로 노무현은 한국의 사회영역에서 계층 간 경제적 수준 차이로 인해 국가 분열을 우려했다. 그는 장기적인 국가과제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정치토대가 필요하다고 보았다.⁴⁹⁾ 하나의 단위로 형성된 정치세력들이 한국 사회경제 영역에서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양극화 문제를 다루어 나가기를 희망했던 것이다. 이를 위해 노무현은 정치영역에서 한국의 대결주의 정치 양상을 바꿀 필요가 있었다.

이 지점에서 한 가지 짚을 것은, 노무현이 인식하는 부정적 대결주의는 단순히 ‘대결을 통한 치열한 정치경쟁’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노무현은 상대가 옳을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겨두지 않고,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 강한 비판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챙기려는 행위를 부정적으로 본다. 반면 선거 규칙을 준수하고 상대를 존중하는 범위에서 서로 간 정책을 중심으로 치열하게 경쟁하는 대결은 긍정적으로 생각했다.⁵⁰⁾ 나아가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을 위해 필요한 정치 행위로 보았다. 노무현은 대결과 경쟁을 거부하지 않았다.

47) 앞의 연설문, 2008, p.234.

48) 참여정부 대통령비서실, 『노무현 “한국정치 이의 있습니다”』, 서울: 역사비평사, 2009, pp.125-126; 박찬승, 앞의 논문, p.23, 참조.

49) 대통령비서실, 『제60주년 광복절 경축사: 대통령 연설문』, 2005, 참조.

50) 대통령비서실, 『연세대학교 초청 연설: 대통령 연설문』, 2004; 앞의 연설문, 2008, p.313; 참여정부 대통령비서실, 앞의 책, pp.32-33, p.145.

서로 반칙하지 않고, 정정당당하게 겨루는 ‘경쟁의 장’을 중요시한 것이다.⁵¹⁾

노무현은 사회영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드러낸다. 그는 대통령 재임 시절 사회 약자를 적극 지원하지만, 한편으로 ‘동반성장’ 기조를 내세워 대기업·재벌 세력과 중소기업·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함께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⁵²⁾ 이러한 환경이 마련될 때,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발전을 지속시킬 수 있고 더불어 사회적 자본이 증대되고 나와 다른 상대를 이해하고 더 나은 해결책을 찾아나가는 성숙한 민주주의도 형성될 수 있다고 보았다. 다시 말해, 서로가 경쟁하면서도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을 형성하려 했다. 특히 노무현은 정치영역에서 합리성이 담보된 채 경쟁할 수 있어야 사회 전체가 서로 갈등과 화해를 통해 더 나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고 보았다.⁵³⁾ 그는 지도자의 상징적 정치 행위를 중요하게 생각했다.⁵⁴⁾ 따라서 노무현은 서로 합리적 생각을 바탕으로 상대와 경쟁할 수 있는 문화를 사회 일반에 뿌리내리기 위해 정치개혁에 적극적이었다.

노무현의 정치개혁에 대한 핵심 문제의식은 역사 재구성이다. 노무현은 한국의 분열·대립 중심의 역사를 청산하고, 화해·통합 담론을 만들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는 대통령 재임 중 적극적으로 과거사 정리를 추진했다. 역사 화해를 이루려는 그의 인식 저변에는 역사 재구성을 통해 화해·통합과 균형, 민주주의, 대화와 타협, 연대와 같은 담론을 생산하기 위함이었다.⁵⁵⁾ 이 담론들은 노무현의 역사 재구성 차원으로 생산된 것과 더불어 경쟁과 대결을 불러일으키는 승자독식형 자본주의 대항담론에 속하는 것이다. 이 과정들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아래 <그림 4>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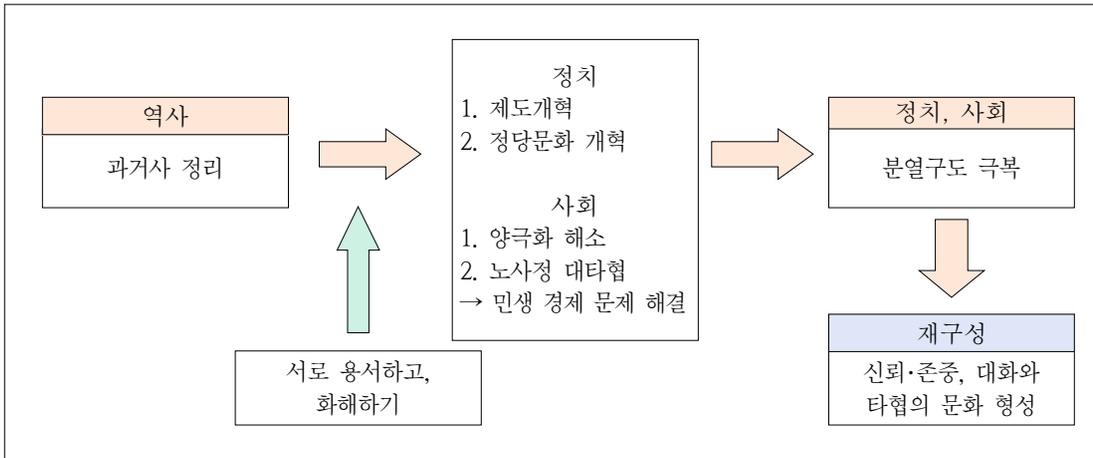
51) 위의 책, pp.144-145, 참조.

52) 대통령비서실, 『노무현 대통령 연설문집 제3권』, 2006, p.58; 대통령비서실, 『경제점검회의 및 격려 오찬: 재임중 대통령 발언록』, 2007.

53) 참여정부 대통령비서실, 앞의 책, p.144.

54) 박찬승, 앞의 논문, p.23.

55) 위의 논문, p.75.



<그림 4> 노무현의 화해를 통한 역사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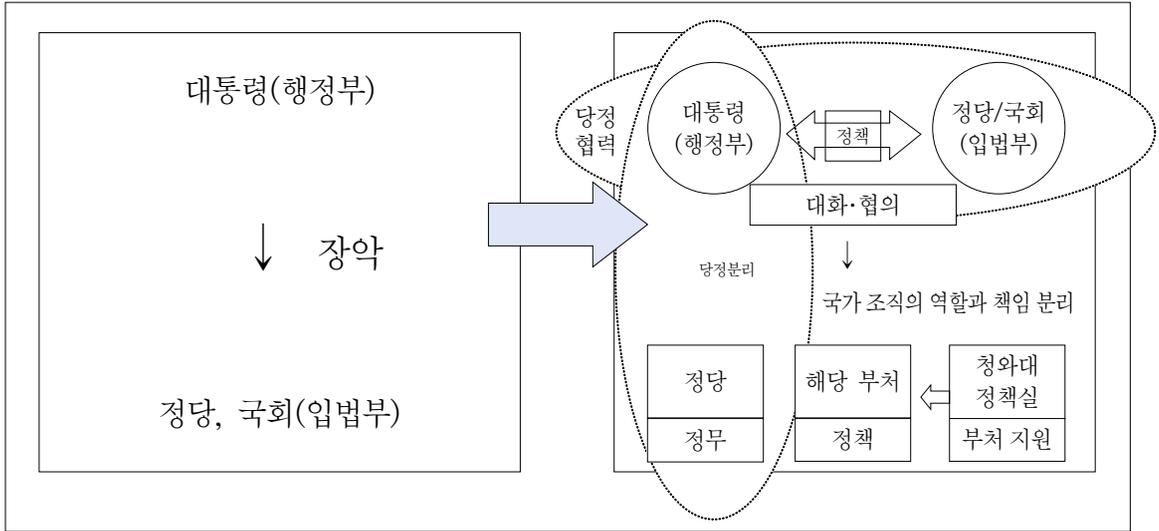
위 <그림 4>와 같이 노무현은 역사 영역에서 과거사 정리를 통해 국내의 갈등 관계를 용서와 화해 중심으로 해소하려고 했다. 또한 이전보다 더 나은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정치·사회 영역에서 제도·정당 문화 개혁, 양극화 해소와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한국의 고질적인 대결과 분열 구도를 극복하려고 했다.⁵⁶⁾ 이 과정을 통해 노무현은 사회적 자본의 가치 신뢰와 존중, 대화와 타협 문화가 형성될 수 있다고 보았다. 특히 노무현의 화해·사회적 자본과 관련한 담론은 정치개혁에 포함되는 당정분리와 선거제개혁을 통해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두 가지 모두 정치세력 간 세력균형에 대한 문제의식에 기인해 실천된 정치 행위들이다. 이를 차례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당정분리다. 노무현은 과거 제왕적 대통령제에 강한 문제의식이 있었다. 기존의 대통령이 행정부, 나아가 집권 여당을 중심으로 정당과 국회까지 장악하는 정치에서는 합의를 통한 정치가 힘들다고 보았다. 따라서 그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행정부와 정당과 국회를 중심으로 한 입법부 간 서로의 고유 영역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국정을 운영했다. 행정부와 입법부는 정책을 중심으로 협의하고, 정당의 정무적인 영역은 대통령이 관여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갔다.⁵⁷⁾ 또한 국가 정책과 관련된 부처들의 자율성을 인정하였고, 이를 청와대 정책실이 지원했다.⁵⁸⁾ 이와 같은 노무현의 구상과 실천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아래 <그림 5>와 같다.

56) 위의 논문, p.117, 169.

57) 대통령비서실, 『국무회의: 재임중 대통령 발언록』, 2005a;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앞의 보고서, p.46.

58) 대통령비서실, 『수석보좌관회의-머리말-: 재임중 대통령 발언록』, 2005b.



<그림 5> 과거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당정분리로 변화

위 <그림 5>처럼 노무현이 생각하는 국가 운영은 대통령 중심으로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방식이 아니다. 서로 간 책임을 공유하는 통합적 당정관계를 이루려고 한 것이었다. 이는 노무현이 역사 재구성의 관점으로 행정·입법 정치세력 간 힘 균형을 이루어 상호 신뢰와 협력을 증진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노무현에게 있어 당정분리가 중요한 이유는 정치세력 간 균형을 이루려는 그의 의지가 돋보이기 때문이다. 근본적으로 당정분리의 대상들(행정·입법 정치세력)은 ‘나(노무현)’를 중심으로 한 정치세력이다. 이전의 정치 과정과 관행들을 참고할 때, 현실적으로 한국 대통령은 이 세력들을 장악하려는 유혹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에 비해, 노무현은 지역·정당 간 세력균형을 이루기에 앞서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부터 균형 있는 정치 집단으로 만들려 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정치·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사람들의 모범적 행위가 선행될 때, 사회 전반적인 문화가 바뀔 것으로 보았다.⁵⁹⁾ 한편 이러한 노무현의 인식은 이송평(2010)이 분석한 노무현의 당정분리를 통해 볼 수 있다.⁶⁰⁾ 아래 이송평의 말을 보자.

“노무현이 집권하기 이전만 하더라도 한국 정치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1인 지배의 정치문화였다. 대통령은 당을 장악하였고, 당직 인선과 공천 등 당의 고유한 영역을

59) 참여정부 대통령비서실, 앞의 책, pp.125-126; 박찬승, 앞의 논문, p.23 참조..

60) 이송평, 『노무현의 민주주의의 혁신전략』,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p.176.

지배하고 있었다. 그리고 임기 말에 이르면 당은 급속도로 대통령 후보를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대통령들의 탈당을 부추겼다. 노무현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자 당정분리의 원칙을 과감하게 받아들였다. 비록 임기 말에 이르러 여당이 해체되고 그 스스로도 탈당을 하는 등 과거와 같은 부정적 정치문화가 답습되는 모습으로 나타났지만, 1인 지배 정치문화 청산을 통한 당내 민주주의를 이루고자 했던 그의 실험은 한국 정치사회의 다양한 실험을 낳게 했으며 각 정당들이 보다 민주적인 정당의 외형을 갖추게 되었다는 점에서 평가되어야 한다.”⁶¹⁾

위 이송평의 말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노무현의 당정분리가 과거 한국 정치사회의 큰 문제점 중 하나인 1인 지배 정치문화를 해소하려는 과정에서 표출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노무현이 정당 민주주의를 형성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정치전략으로 볼 수 있다.⁶²⁾ 특히 이송평은 노무현의 당정분리로 한국의 정당들이 이전보다 민주적인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고 한다. 역사 재구성 관점에서 노무현은 당정분리를 통해 ‘상호 간 신뢰를 기반으로 한 정치’, ‘세력 간 균형’의 가치를 어느 정도 내포시켰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짚을 것은, 노무현의 당정분리가 정치적 부작용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참여정부 정치개혁의 성과와 과제』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당정분리가 실천된 후 당정갈등은 정부·여당의 정체성 훼손, 중점 국정과제의 근간에 대한 무질서한 이견 표출, 대통령 인사권 제약 등 국정에 타격을 입히는 방식으로 증폭되기도 했다.⁶³⁾ 그러나 이송평이 밝히듯, 노무현의 정치 시도를 통해서 한국 정치사회의 다양한 실험이 이루어지게 하고 한국 정당들이 이전보다 민주적인 정당의 외형을 갖추게 된 것은 의미가 있다. 한국의 부정적 정치문화를 해소하고, 대화와 타협, 균형을 이루기 위한 정치 시도였다는 것이다.

둘째, 선거제도 개혁이다. 노무현의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은 정치세력 간 제대로 된 ‘경쟁의 장’을 형성하는 것이었다. 흔히 우리가 노무현에 대한 선거개혁을 생각할 때, ‘선거 후보자 선출 방식’을 먼저 떠올리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그는 선거 후보자 선출 방식과 더불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선거를 관리하는 제도인 선거공영제를 통해 정치세력 간 힘 균형이 이루어지는 걸 중요하게 보았다.⁶⁴⁾ 결과적으로 이 두 가지 종류의 선거개혁 중 후보자 선출 방식보다는 선거공영제와 관련된 제도가 실질적인 성과를 낳았다.⁶⁵⁾

61) 위의 논문, p.243.

62) 위의 논문, p.176.

63)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앞의 보고서, p.52.

64) 위의 보고서, p.22.

65) 노무현은 대통령 재임 시절 『정치개혁 입법과 관련한 대국회 서신』을 통해 현행 소선거구제가 수정이 필

노무현은 선거공영제와 관련해 한국의 금권선거를 청산하려고 했고, 정치신인이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기 위해 노력했다.⁶⁶⁾ 그는 정정당당한 경쟁의 토대 위에서 서로 간 대결할 수 있는 ‘선거의 장’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이러한 노무현의 인식은 상대에게 여지를 남겨두지 않은 채 대결하는 것과는 분명히 다르다.⁶⁷⁾

하지만 노무현은 공명선거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표에 과도하게 몰입한 측면이 있다. 가령, 선거공영제가 실천될 때 ‘선거 규제’ 중심으로 이루어진 경향이 컸다.⁶⁸⁾ 이는 원래의 입법 취지와는 다소 거리가 먼 모습이다. 이 방식은 부정한 선거문화를 청산하고, 다양한 사람들에게 선거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데 한계가 있었다. 노무현은 한국 선거에서 공영성의 강화와 선거비용의 감소 모두 중요하다고 보았다.⁶⁹⁾

이 지점에서 한 가지 물음을 던질 수 있다. 선거의 공영성 강화와 더불어 선거비용 감소가 보편화된다면 선거운동의 질은 담보가 될 수 있을까? 김영태는 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운동 제약으로 오히려 후보들이 유권자들을 대면하는 기회가 줄어들었다고 한다.⁷⁰⁾ 이는 좋은 의도로 출발한 정책이 반드시 좋은 결과를 내지는 못한다는 걸 의미한다. 또한 입법 활동은 새로운 시민문화를 만들어야 의미가 커진다는 걸 보여준다.⁷¹⁾ 그 경우에 지도자의 정치 행위가 시민사회에 큰 파급효과를 낼 수 있다. 대통령으로서 노무현은 이를 충분히 염두에 두어야 했었다. 따라서 노무현과 당시의 청와대 참모진들이 선거와 관련된 입법을 추진할 때, 다소 선부르게 판단한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노무현 역시도 대통령 임기 후반쯤에 이르러서는 규제 중심의 선거는 과거의 군사독재 시절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라 말한 바 있다.⁷²⁾ 즉 스스로 현행 선거제도가 다시 가다듬어질 필요성을 느낀 것이었다.

노무현의 선거공영제 중심의 선거개혁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 보이지만, 유의미한 성과는 충분히 있다. 특히 노무현의 부정선거 해소에 관한 문제의식은 정치영역뿐만 아니라 사회 일반에도 영향 미쳤다. 기본적으로 선거운동은 정치와 사회영역이 긴밀하게 연결되

요하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하지만 이 시도는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는 못한다(대통령비서실, 『노무현 대통령 연설문집 제1권』, 2004, pp.569-570; 위의 보고서, p.77, 79).

66) 대통령비서실, 『제243회 정기국회 시정연설: 대통령 연설문』, 2003a; 노무현, 『선거의 공영성 제고방안 준비』, 2006.

67) 참여정부 대통령비서실, 앞의 책, pp.143-144 참조.

68)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앞의 보고서, p.25.

69) 노무현, 앞의 대통령 지시사항.

70)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앞의 보고서, p.26(재인용: 『연합뉴스』, 2004년 8월 13일).

71) 노무현의 규제 중심의 선거제 입법은 오히려 새로운 시민문화를 만들어 내는 데 방해된 측면도 있어 보인다.

72) 대통령비서실, 『노무현 대통령 연설문집 제5권』, 2008, p.427.

어 있다. 금권선거에 대한 강한 법률적 제재는 보통 사람들의 인식에도 영향 미쳤다. 특히 농·수·축협 등의 조합장 선거, 국립대학 총장 선거, 정당의 당내경선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 위탁이 된 것은 한국의 부정적 선거문화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사회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⁷³⁾ 또한 소액 다수 기부문화 문화가 생겨나고, 선거비용의 상당 금액이 보전되면서 정치 경험과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⁷⁴⁾ 아래 <표 1>을 통해 노무현의 선거공영제 성과를 보자.

<표 1> 선거공영제를 통한 한국 선거문화 개선 효과 및 사례

효과 및 사례 시도	효과	사례
선거자금 선진화	1. 금권선거 해소 2. 소액 다수 기부문화 활성화	1. 『이코노미스트』 민주주의 지수 조사: 10점 만점에 9.58점 2. 정치자금 모금액 상위 순에 초·재선, 소수정당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간 균형을 이루기 위한 노력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후보에 대한 지원 정책	17대 총선에서 4개 정당이 청구한 선거비용 보전액은 총 640억 7337 만원으로 16대 총선의 194억 2451 만원보다 2.3배나 증가
사회 일반 공명선거 분위기 확산	공명한 선거문화가 근본적으로 형성 되는 계기 마련	농·수·축협 등의 조합장 선거, 국립 대학 총장 선거, 정당의 당내경선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 위탁

출처: 위의 보고서, p.20, 22, 33; 박찬승, 앞의 논문, p.113; 참여정부 대통령 비서실, 앞의 책, p.52(재인용: 『이코노미스트』, 2006), 참조.

위 <표 1>에 나와 있듯, 노무현의 실질적인 선거제도 입법 성과로 크게 선거자금의 선진화, 후보자 간 힘의 균형을 이루기 위한 선거비용 지원 정책, 사회 일반에까지 공명선거 분위기가 퍼진 것이다. 이를 통해 노무현이 한국 정치영역에서 대립과 분열을 해소하는 화해정치를 실천했고, 정치세력 간 세력균형을 이루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려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노무현의 정치행위는 ‘화해의 토대’를 형성하려 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노무현은 서로 간 신뢰와 협력, 호혜성이

73) 노무현 대통령 참모진의 보고 문서를 참고하였다. 이는 노무현의 지시사항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작성했다(노무현, 『달라진 선거문화에 대한 자료를 정리해서 보고해줄 것』, 2006).

74)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앞의 보고서, p.20, 22.

증대되고 승자독식형 자본주의 담론에 대항할 만한 우리의 사회적 자본이 증대될 수 있다고 보았다.

노무현은 정치개혁을 통해 한국에 오랫동안 축적되어 있던 부정적 정치 담론을 재구성하려고 했다. 화해의 토대를 형성해, 그 토대 위에서 한국의 정치세력들이 서로 대화와 타협을 중심으로 정치 행위를 펼치는 모습을 생각한 것이다. 그는 이 과정을 통해 진보 담론이 확장되고, 그 담론을 지지하는 정치세력들의 헤게모니가 확장될 수 있다고 보았다.⁷⁵⁾

2. 연합정치: 화해·진보 담론 확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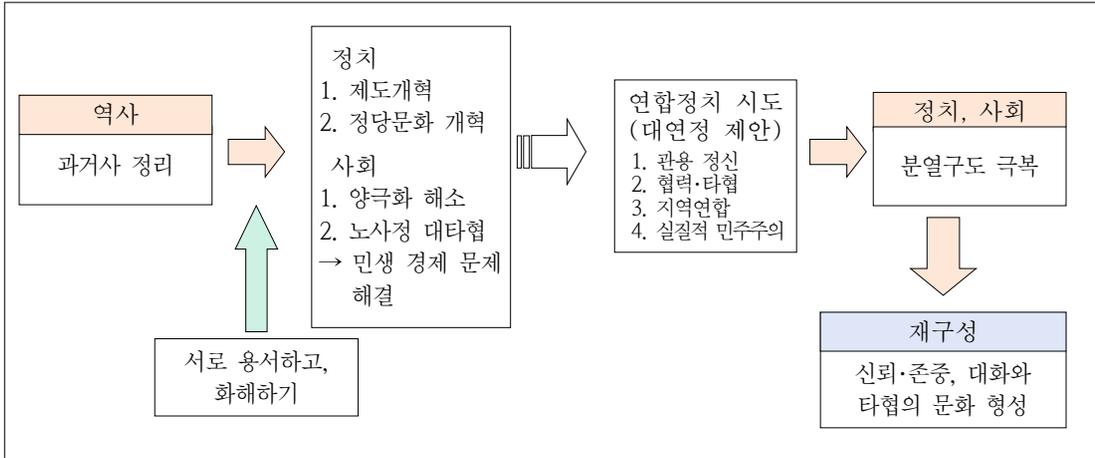
노무현은 한나라당과 연합정치를 시도하게 된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대연정 제안을 통해 한국 정치·사회에 표출된다. 노무현의 대연정 제안은 그가 정치활동을 하는 동안 중요하게 생각했던 정치·사회적 문제의식을 하나로 응축해 보여준 정치 행위라고 볼 수 있다.⁷⁶⁾

노무현에게 대연정 제안은 1990년 김영삼의 3당 합당으로 파생된 극단적 대결과 기회주의 담론에 정면으로 대항하는 정치 행위다. 그에게 김영삼의 3당 합당은 한국의 지역·대결 정치를 더 악화시키는 사건이었다. 또한 대연정 제안은 경제 수준의 양극화와 같은 국가의 사회경제적 문제를 초당적 회의를 통해 해결하기 위해 시도됐다.⁷⁷⁾ 이러한 노무현의 대연정 제안도 정치개혁과 마찬가지로 역사 재구성의 관점에서 출발한다. 앞서 제시했던, <그림 4> ‘노무현의 화해를 통한 역사 재구성’에서 노무현의 대연정 제안까지 추가하면 아래 <그림 6>과 같다.

75) 노무현의 경우 자신을 중심으로 한 정치세력들의 헤게모니를 넓혀나가기를 원했다. 그 전략으로서 대화와 타협, 선거, 정책을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은 이를 민주주의 권력투쟁으로 표현했다(노무현, 『성공과 좌절』, 서울: 행복한국책읽기, 2009, p.34 참조).

76) 노무현은 정치활동을 하는 동안 1990년 김영삼의 3당합당에 대해 강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3당합당 때 형성된 정치 구도를 재편성할 수 있는 전략이 대연정으로 보았다(노무현, 앞의 책, p.45; 윤태영, 『바보, 산을 옮기다』, 파주: 문학동네, 2015, p.186).

77) 박찬승, 앞의 논문, p.117.



<그림 6> 노무현의 화해를 통한 역사 재구성: 연합정치 시도

위 <그림 6>에서 보듯, 노무현의 대연정 제안은 정치·사회 영역에서의 정치행위 연장선으로 행해졌고 그의 축적된 문제의식이 표면적으로 나타난 것이었다. 노무현의 대연정에 내재된 ‘관용 정신’, ‘협력·타협’, ‘지역연합’, ‘실질적 민주주의’는 분열구도 극복의 기제로 작용한다. 이는 노무현의 화해를 통한 역사 재구성 차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그렇다면 노무현의 대연정 제안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배경과 내부적 구조가 있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노무현의 대연정 제안을 살펴봄에 따라 그의 저변에 있는 화해와 관련한 의식을 볼 수 있다.

노무현은 대통령 재임 중 2005년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에게 대연정을 제안하고, 거절당한다. 그의 대연정 제안은 한나라당에게 총리를 양보하는 정도의 수준이었다.⁷⁸⁾ 의회 내 다수 의석을 확보한 정당에게 책임을 맡기는 내각제 체제를 구상했던 것이었다. 이러한 노무현의 정치구상은 한나라당뿐만 아니라 노무현 자신을 중심으로 한 정치세력에게도 동의 받기가 어려운 정치 시도였다.⁷⁹⁾ 그럼에도 노무현이 대연정을 제안한 이유는 무엇일까? 앞서 언급했듯, 노무현의 대연정 제안에는 네 가지 의미(관용 정신, 협력·타협, 지역연합, 실질적 민주주의)가 내재되어 있다.

첫째, 대연정 제안은 노무현의 핵심 가치와 연관성이 크다. 노무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중 하나는 관용이었다. 노무현에게 관용의 정신을 구현하는 건 대화와 타협의 민주주의로 가는 길 의미한다. 노무현은 민주주의의 궁극적 모습으로 ‘민주주의 3단계’,

78) 윤태영, 앞의 책, pp.127-128.

79) 노무현, 앞의 책, p.244.

혹은 ‘성숙한 민주주의’를 지향한다. 이는 정책을 중심으로 토론과 타협이 일상화되고, 연합정부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수준을 의미한다.⁸⁰⁾ 이러한 노무현의 이상적 정치형태 안에는 나와 다른 상대에 대해 항상 여지를 남겨두고, 판단하는 관용의 가치가 자리하고 있다. 노무현에게는 이 가치가 표출되는 구체적 정치형태가 대연정일 수 있다.

둘째, 한국의 분열주의 정치를 재구성하는 것이었다. 노무현은 1990년 3당 합당을 기점으로 임계(臨界)점을 넘어간 한국의 분열·대결적 정치 경향을 큰 정치적 기획을 통해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⁸¹⁾ 노무현에게 대화와 타협을 중심으로 한 대연정은 정치영역에서 선진적 정치가 이루어지는 정도에 그치지 않는다. 그 영향은 한국의 시민사회영역으로까지 퍼져나가기를 기대했다. 이를 통해 사회 전반에 화해·진보 담론이 강화될 것으로 보았다.⁸²⁾ 노무현은 정치 지도자들의 정치 행위는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인식했기에, 자신의 정치 행위가 정치영역 외 다른 영역에서도 충분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 것이다.⁸³⁾ 그는 한국 사회가 나와 다른 상대를 억압하고 배제하는 습관이 있다고 보았다.⁸⁴⁾ 대연정을 통한 협력과 타협 중심의 대항담론 생산은 이를 어느 정도 해소할 것으로 생각했다.

셋째, 지역주의를 해소하기 위함이었다. 노무현은 한국의 지역주의 구도는 대결과 분열의 정치를 낳게 하고, 정치발전의 장애물로 작동된다고 보았다.⁸⁵⁾ 특정 정당이 특정 지역을 독점하는 정치 구도를 극복하기 위해서 선거제도 중 후보자 선출 방식을 수정하기를 원했다. 노무현은 현행 소선거구제에 대해 강한 문제의식이 있었다. 그는 대안으로 중대선거구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농복합선거구제를 생각했다.⁸⁶⁾ 그래서 한나라당이 선거제도 안을 수용하는 대가로 대연정을 통해 내각을 넘겨줄 것을 계획한 것이다. 또한 노무현은 대연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영·호남 지역연합이 형성되어 지역주의 해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았을 것이다. 노무현은 대통령 임기 초 『광주전남지역 언론인과의 만남』에서 한국 전체 정치 구도가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호남을 기반으로 한 민주당과 영남을 기반으로 한 한나라당 각각에 대해 문제의식을 드러낸다.⁸⁷⁾ 앞서 언급했듯, 그는 정치영역에서 정치세력 간 타협은 일반 사회영역까지 영향이 퍼질 것으로 보았

80) 대통령비서실, 『노무현 대통령 연설문집 제4권』, 2007, p.597.

81) 노무현, 앞의 책, pp.153-154; 윤태영, 앞의 책, p.186.

82) 앞의 연설문, 2006, p.281; 참여정부 대통령비서실, 앞의 책, pp.125-126.

83) 노무현, 앞의 책, p.243.

84) 대통령비서실, 『노무현 대통령 연설문집 제2권』, 2005, p.151, 168.

85)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앞의 보고서, pp.63-64, 참조.

86) 대통령비서실, 『노무현 대통령 연설문집 제1권』, 2004, pp.569-570.

87) 대통령비서실, 『광주전남지역 언론인과의 만남: 재임중 대통령 발언록』, 2003.

다. 노무현은 정치영역에서 영·호남을 기반으로 한 정당 간 타협이 자연스럽게 시민사회에 영향 미쳐 정치사회 세력 간 지역연합의 형태가 형성될 것을 예상했을 수 있다.

넷째, 실질적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함이었다. 앞서 언급했듯, 노무현은 장기적이고 전략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국가적 문제의 경우 다수의 정치세력이 함께 힘을 합쳐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보았다.⁸⁸⁾ 그는 대연정을 현실로 옮기게 되면 정당 간에 합동의총을 실시하게 된다고 보았다. 노무현은 이념이 서로 다른 정당 간 합동의총을 통해 토론을 펼친다면 이전보다 소모적 대결이 줄어들고, 수월하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⁸⁹⁾ 그는 경제적 불평등과 같은 장기적 관점이 필요한 사안들에 국회의원들이 집중하리라 보았을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노무현은 다수의 국민이 경제적 불평등에서 벗어나고, 정치와 민주주의 영역에 직접 참여해 자신들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⁹⁰⁾

이러한 노무현의 대연정 정치기획은 의미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현실 정치에서 쉽게 좌절되고 만다. 그 원인은 한나라당의 냉소적인 태도도 있었지만, ‘국가 구성원의 동의 부재’, ‘이념이 비슷한 정치 집단 설득 부재’, ‘자기를 중심으로 한 정치 집단 통합 부재’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세 가지 부재는 정치적으로 상황을 풀어나가는 정무적 영역의 ‘소홀함’에서 기인됐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무현은 시민사회 여론을 간과했다. 그는 자신의 획기적인 정치기획이라고 할 수 있는 대연정을 추진할 때, 국민 여론의 힘을 얻을 필요가 있었다. 당시 한국 정치 현실에서 대연정과 같은 파격적인 정치기획이 구현되는 건 무리가 있었다.⁹¹⁾ 그래서 만약 노무현이 시민사회로부터 먼저 동의 받은 후 대연정을 시도했다면 어땠는지 생각해 볼 수 있다. 시민사회, 집권여당, 이념이 비슷한 야당, 이념이 서로 다른 야당 순으로 점진적으로 설득했다면 그의 대연정 시도는 정치적으로 큰 힘을 발휘했을 수 있다. 당시 여론 조사에서 대연정 제안에 대해서 ‘공감한다’는 응답보다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거의 2배 높게 나왔었다.⁹²⁾

둘째, 노무현은 ‘나’와 생각이 비슷한 ‘우리’를 설득하는 데 소홀히 했다. 그는 시민사회에서 동의를 얻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 집권여당을 비롯한 이념적 색채가

88) 참여정부 대통령비서실, 앞의 책, pp.125-126.

89) 대통령비서실, 『수석·보좌관회의-대연정 제안과 과거사 정리-: 재임중 대통령 발언록』, 2005c.

90) 위의 발언록, 2005c; 대통령비서실, 『원광대학교 명예박사학위 수여식 강연: 대통령 연설문』, 2007f, 참조.

91) 노무현 역시도 대연정을 회고하며, 자기 자신이 지나치게 이상주의적이었다고 말했다(노무현, 앞의 책, p.243).

92) “반환점 돈 노무현 정권, 한겨레 여론조사”, 『한겨레』 2005년 8월 24일.

비슷한 야당에게도 동의를 얻지 못했다.⁹³⁾ 노무현은 대연정이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소연정이 될 것으로 보았다.⁹⁴⁾ 하지만 이것은 성공을 담보할 수 없는 정치기획이다. 김학노(2010)는 소아(小我)가 뭉쳐 대아(大我)로 형성되는데 그 과정에서 동의와 설득 과정을 충분히 거치지 않는다면 소아가 합쳐지는 가운데 그 안에 몇몇 소아들은 편승하는 걸 거부할 수 있다고 한다.⁹⁵⁾ 즉 ‘나’와 비슷해 보이는 ‘우리’라고 하더라도 어떤 경우에 의해 하나가 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노무현은 자기중심성을 가지되 나와 비슷한 상대를 동의와 설득을 통해 우리 안에 속하게 만들어야 했다. 이후 자기와 거리가 먼 상대 세력을 설득했어야 했다.

셋째, 노무현은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승리 후 열린우리당 내 다양한 정치세력을 적절한 수준에서 통합시켜야 했다. 대통령 자신이 정치적 의지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통합된 정치세력의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그는 총선 후 당내 통합을 위한 구체적 노력을 기하기보다 자신이 생각한 정치기획(책임총리제, 당정분리 등)을 구현하기 위해 강한 의지를 드러낸다.⁹⁶⁾ 이는 당내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기제로 작용했다. 또한 노무현은 당내갈등의 소지가 정확히 무엇인지 파악하고 있었다고 보기에 힘들다. 당시 선거에 당선된 여당의 국회의원 집단들은 매우 다양했다. 노무현 최측근 세력부터, 정동영, 김근태, 개혁당, 80년대 운동권 세력까지 있었다. 특히 이 시기 개혁적 성향이 강한 80년대 운동권 세력의 경우 사회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기대를 모았지만, 한편으로는 정치세력들 사이에서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해졌다. 노무현은 이 다양한 정치세력을 어떻게 통합시킬 것인가를 심도 있게 고민했어야 했다. 하지만 그는 당내갈등의 원인을 지역주의의 원심력 작용으로 보았다.⁹⁷⁾

이처럼 노무현의 대연정 시도는 사전에 여러 정치사회 세력과의 긴밀한 토론을 통한 공론화가 제대로 실천되지 않아, 다소 허무하게 실패했다. 하지만 이 시도가 실패했다고 해서, 그 의미가 없는 건 아니다. 노무현이 대연정에 대한 의제를 정치사회에 표출함에 따라 몇몇 정치인들과 시민들이 연합정치에 대해 고민하게 된 계기를 만든 것 자체가 의

93) “민주노동당이 한나라당을 만날 때...”, 『한겨레21』 2004년 7월 28일;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앞의 보고서, p.85.

94) 윤태영, 앞의 책, p.187.

95) 김학노, “정치, 아(我)와 비아(非我)의 헤게모니 투쟁”, 『한국정치학회보』, 제44집 제1호, 한국정치학회, 2010, p.43.

96) 이남주, “잘못된 정치전략과 지지기반의 와해”, 한반도사회경제연구회 편, 『노무현 시대의 좌절』, 파주: 창비, 2008, p.35; 이송평, 앞의 논문, p.176, pp.182-183; 윤태영, 앞의 책, p.335; 노무현, 『운명이다』, 파주: 들베개, 2019, p.286.

97) “심사들린 盧, 꼬이는 黨-靑”, 『경향신문』 2004년 4월 16일; “운동권 대거 금배지 개혁입법 힘실릴 듯”, 『서울경제』 2004년 4월 16일; 앞의 연설문, 2007, p.565.

미 있다. 기본적으로 이념이 다른 정당 간 연합정치를 이루는 대연정은 승자독식형 자본주의의 대항담론에 포함되는 연대, 타협, 신뢰 담론을 만드는 시도다. 이는 사회적 자본 증대 정치와도 연결되는 것이다. 또한 노무현 후속세대 정치인들이 실제로 대연정을 실현하고, 발전시키려는 시도들이 있었다. 이들에게 노무현의 정치 시도가 본보기가 된 것이다.⁹⁸⁾

IV. 결론

이 연구는 노무현의 화해정치가 사회적 자본 증대 정치전략으로 활용됐다는 것을 밝혔다. 그는 사회적 자본 축적의 전제 중 하나로 화해정치를 생각했다. 노무현의 화해정치에서 파생되는 담론은 사회적 자본 개념에서도 강조하는 신뢰, 타협, 연대가 포함된다. 이 화해정치는 승자독식형 자본주의의 대항담론으로서 의미가 있다. 또한 노무현의 화해정치를 통한 사회적 자본 증대 정치는 역사 재구성을 기반으로 해 실천된다. 노무현은 과거 한국 역사에서 벌어졌던 분열과 극한 대립이 슬픈 역사를 낳게 되었다는 문제의식을 지니고 있다. 그는 이러한 역사를 현실에서 재구성하는 정치를 펼쳤다. 특히 정치영역에서 화해정치를 통한 사회적 자본 증대 정치를 정치개혁과 연합정치를 통해 실천했다. 이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개혁이다. 이 연구에서는 노무현의 정치개혁을 당정분리와 선거공영제를 중심으로 보았다. 노무현의 당정분리와 선거공영제 중심의 정치개혁은 정치세력 간 힘 균형을 이루려는 시도였다. 당정분리는 대통령 중심의 행정부와 의회 중심의 집권여당과 세력균형을 이루려는 의도에서 실천됐다. 노무현은 과거 대통령 1인 지배 정치문화를 청산하고,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고유 영역을 인정하는 가운데서 서로가 발전적 관계를 형성하려고 했다. 그는 이전처럼 행정부가 정당이 책임지는 정부적 일에 관여하지 않게 했다. 다만 정책적인 영역으로 제한해서 대화와 협의를 시도했다. 선거공영제를 중심으로 한 개혁은 기존 정치권의 기득 세력과 정치 경험이 적은 정치신인·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후보자들 간의 힘의 균형을 이루려는 시도였다. 또한 그는 선거자금 선진화, 선거비용 보전액 증대, 사회 일반에까지 공명선거 분위기 확산을 통해 투명한 선거문화를 만들려고 했다. 이를 통해 노무현은 선거 후보자들 간 정정당당하게 겨룰 수 있는 ‘경쟁의 장’을

98) 안희정 대연정, 남경필 “동의한다... 내가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일”, 『머니S』 2017년 2월 3일; 이재명 “홍의락, 권영진 대구부시장 제안 받으라...노무현 대연정 실현해야”, 『한국일보』 2020년 6월 24일.

형성하려고 했다.

둘째, 연합정치다. 노무현은 이념이 다른 정당 간 연합정치를 펼치는 대연정을 한나라당 상대로 시도한다. 이 정치기획에서 주목할 점은 노무현이 대연정을 통해 정치영역에서 생산되는 대화와 타협, 협력, 화해의 담론이 시민사회 영역으로까지 파급되어 사회 전반이 이전보다 성숙한 민주주의 문화가 자리 잡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는 것이다. 또한 한국의 정치세력 간 대타협을 통해 양극화와 같은 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했다.

정치영역에서 노무현의 화해정치를 통한 사회적 자본 증대 정치는 정치세력 간 협력·타협을 수월하게 하고, 힘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정치개혁과 연합정치를 실천한다. 정치개혁에서 정치세력 간 세력균형을 이루고 정정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는 판을 형성한다는 부분에서 ‘화해의 토대’를 만들려고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대연정을 통한 연합정치 시도는 정치개혁에 비해 화해정치를 직접적으로 실천한 경우로 볼 수 있다. 이 대연정 제안은 대립하고 있던 경쟁 정당과 함께 협력하여 새로운 정치·사회 문화를 만들려고 했다. 이를 통해 노무현은 승자독식형 자본주의에서 파생되는 담론에 맞서 사회적 자본이 증대될 수 있고, 화해·진보 담론이 강화될 수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 노무현의 정치 시도는 제대로 실천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 당시 여러 정치 의제를 볼 때, 노무현은 한국적 현실을 토대로 두고 정치를 수행했다고 보기 힘들다. 노무현 세력은 지역주의와 권위주의 타파를 중요한 과제로 생각했지만, 그보다 더 시급한 건 민생 안정과 빈부격차 해소일 수 있다. 또한 과거사 문제 해결, 국가보안법 폐지, 국가 균형 발전과 같은 정책들의 경우 보수세력이 득세한 한국 현실에서 실현하기 어려운 과제였다.⁹⁹⁾ 또한 이 연구에서 주목한 노무현의 당정분리는 대통령과 여당의 기계적인 분리, 여당 리더십의 분화와 기계적인 교체, 중앙당의 축소를 낳아 정당의 구심점이 형성되기 어려웠다.¹⁰⁰⁾ 노무현의 당정분리로 대통령과 여당 간 정무적 소통이 이뤄져야 하는 정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다루지 못한 부분도 있어 보인다. 특히 노무현의 대연정 제안 실패의 경우 정무적 영역의 부재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했는데, 이는 당정분리의 부작용과 긴밀히 연결되는 것이다.¹⁰¹⁾ 이와 같은 노무현의 정치는 오히려 대결과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사회적 자본 증대에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일 수

99) 김영명,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과 퇴보”, 『한국정치연구』, 제23집 제3호,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2014, p.154.

100) 김인균, “3김의 퇴장과 정치개혁 담론, 그리고 정당개혁: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을 중심으로”, 『의정논총』, 제15권 제2호, 한국의정연구회, 2020, p.131.

101) 위의 논문, p.127.

있다. 노무현이 한국적 현실을 고려하지 못해, 애초에 의도했던 것과 달리 파생된 정치적 부작용에 대한 논의는 향후 연구에서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다.

오늘날 AI 인공지능과 SNS의 발전, 사람들의 개인주의 성향 강화가 맞물리면서 자본주의 담론 강세는 그 어느 시기보다 강해 보인다. 발전된 미래에 대한 기대와 인간 가치에 대한 담론 위기가 함께 다가오고 있다. 특히 정치영역에서 SNS의 발전은 여러 우려를 낳고 있다. 고도로 발전된 인터넷 네트워크는 이용자에게 수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 SNS는 이용자의 선호 성향을 파악할 수 있고, 알고리즘을 통해 제한된 정보를 제공하는 특성을 가진다. 결국 사람들은 원하는 정보와 사실만 듣는 확증편향의 경향이 강해졌다. 이 현상은 우리의 정치영역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나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해나가는 게 어려워진 것이다. 어떻게 보면, 현재 한국은 경제 수준의 양극화뿐만 아니라 정치·사회 일반에서도 심한 양극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은 1997년 IMF 상황과는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일수록 우리는 이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화해·통합 담론을 키우고, 새로운 길을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다. 기술 발전을 통해 이전보다 사람들 간 더 끈끈하게 연대하게 하고, 서로의 의견을 수월하게 나눌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AI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하더라도 인간의 고유 능력이 쓸모 없어지기보다는 인간이 기계와 어떻게 협력하느냐에 따라 여러 가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 ‘AI-AI’ 협력보다 ‘인간-AI’ 협력이 더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¹⁰²⁾ 이는 기술과 승자독식형 자본주의가 강세를 보이는 시대에도 사람들 간 어떻게 협력하고 상호작용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인간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이런 현실을 고려할 때, 노무현의 화해정치를 통한 사회적 자본 증대 정치가 가지는 의미는 크다고 할 수 있다. 노무현의 승자독식형 자본주의 대항담론은 연대·관용·타협을 중심으로 한다. 이 시기 이 담론 정치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새로운 정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

참고문헌

- 곽정수 외, 『한국경제 새판 짜기: 박정희 이상과 신자유주의 미신을 넘어서』, 서울: 미들하우스, 2007.
국정홍보비서관실, 『정책기획위원회 오찬연설 <민주주의론> 주제별 정리』, 2006.
김도중, “한국학생운동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NGO연구』, 제2권 제1호, 한국NGO학회, 2004.

102) 박일준, 앞의 책, p.197.

- 김수성·김성문, “진보정당에 관한 신문기사의 경향성 분석”, 『사회과학연구』, 제21집 1호,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5.
- 김영명,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과 퇴보”, 『한국정치연구』, 제23집 3호,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2014.
- 김유은, “IMF 거버넌스에 있어 시민사회의 역할”, 『시민사회와 NGO』, 제7권 제2호,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2009.
- 김인균, “3김의 퇴장과 정치개혁 담론, 그리고 정당개혁: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을 중심으로”, 『의정논총』, 제15권 제2호, 한국의정연구회, 2020.
- 김정인, “한국 사회에서의 숙의민주주의 제도화 가능성에 관한 연구: 일본 삿포로 시 제설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22권 제1호, 한국정책과학학회, 2018.
- 김학노, “정치, 아(我)와 비아(非我)의 헤게모니 투쟁”, 『한국정치학회보』, 제44집 제1호, 한국정치학회, 2010.
- 김학노, 『남과 북의 서로주체적 통합』, 서울: 사회평론아카데미, 2018.
- 노무현, 『달라진 선거문화에 대한 자료를 정리해서 보고해줄 것』, 2006.
- 노무현, 『선거의 공정성 제고방안 준비』, 2006.
- 노무현, 『성공과 좌절』, 서울: 행복한국읽기, 2009.
- 노무현, 『운명이다』, 파주: 돌베개, 2019.
- 대통령비서실, 『제243회 정기국회 시정연설: 대통령 연설문』, 2003a.
- 대통령비서실, 『연세대학교 초청 연설: 대통령 연설문』, 2004.
- 대통령비서실, 『제60주년 광복절 경축사: 대통령 연설문』, 2005.
- 대통령비서실, 『2007년 신년연설: 대통령 연설문』, 2007a.
- 대통령비서실, 『벤처기업인을 위한 특강: 대통령 연설문』, 2007b.
- 대통령비서실, 『진보 진영 내 논쟁에 관한 기고문-대한민국 진보, 달라져야 합니다: 대통령 연설문』, 2007c.
- 대통령비서실, 『참여정부 평가포럼 강연: 대통령 연설문』, 2007d.
- 대통령비서실, 『6·10민주항쟁 20주년 기념사: 대통령 연설문』, 2007e.
- 대통령비서실, 『원광대학교 명예박사학위 수여식 강연: 대통령 연설문』, 2007f.
- 대통령비서실, 『광주전남지역 언론인과의 만남: 재임중 대통령 발언록』, 2003.
- 대통령비서실, 『국무회의: 재임중 대통령 발언록』, 2005a.
- 대통령비서실, 『수석보좌관회의-머리말-: 재임중 대통령 발언록』, 2005b.
- 대통령비서실, 『수석·보좌관회의-대연정 제안과 과거사 정리-: 재임중 대통령 발언록』, 2005c.
- 대통령비서실, 『정책기획위원회 신규위원 위촉장 수여식 및 오찬: 재임중 대통령 발언록』, 2006.
- 대통령비서실, 『경제점검회의 및 격려 오찬: 재임중 대통령 발언록』, 2007.
- 대통령비서실, 『노무현 대통령 연설문집 제1권-2003년 2월 25일~2004년 1월 31일-』, 2004.
- 대통령비서실, 『노무현 대통령 연설문집 제2권-2004년 2월 1일~2005년 1월 31일-』, 2005.
- 대통령비서실, 『노무현 대통령 연설문집 제3권-2005년 2월 1일~2006년 1월 31일-』, 2006.
- 대통령비서실, 『노무현 대통령 연설문집 제4권-2006년 2월 1일~2007년 1월 31일-』, 2007.
- 대통령비서실, 『노무현 대통령 연설문집 제5권-2007년 2월 1일~2008년 2월-』, 2008.
-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참여정부 정치개혁의 성과와 과제-깨끗한 정치, 대화와 타협의 정치 구현-』,

2008.

- 무패, 이승원 역, 『좌파 포퓰리즘 위하여』, 서울: 문학세계사, 2019.
- 박일준, 『인공지능 시대, 인간을 묻다』, 서울: 동연, 2018.
- 박찬승, 『노무현의 화해정치』,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4.
- 변양균, 『노무현 따뜻한 경제학』, 서울: 바다출판사, 2012.
- 부르디외, 유석춘 외 역, “자본의 형태”, 『사회자본-이론과 쟁점-』, 서울: 그린, 2003.
- 심영희, “IMF시대의 청소년문제 양상과 과제-위협사회의 관점에서-”, 『청소년학연구』, 제5권 제3호, 한국청소년학회, 1998.
- 이남주, “잘못된 정치전략과 지지기반의 와해”, 한반도사회경제연구회 편, 『노무현 시대의 좌절』, 광주: 창비, 2008.
- 이남철, “IMF체제 이후 한국 노동시장의 변화”, 『지역사회』, 겨울호 통권 제39호, 한국지역사회연구소, 2001.
- 이병천,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축적체제: 수출주도 수익추구 축적체제의 특성과 저진로 함정”, 『동향과 전망』, 81호, 한국사회과학연구회, 2011.
- 이송평, 『노무현의 민주주의 혁신전략』,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 윤태영, 『바보, 산을 옮기다』, 광주: 문학동네, 2015.
- 인후남·이제경, “IMF경제위기 직후 노동시장에 진입한 직장 남성의 진로구성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Andragogy Today』, 제18권 제3호, 한국성인교육학회, 2015.
- 장하성, 『한국 자본주의』, 성남: 헤이박스, 2014.
- 지병근, “한국진보정당의 조직, 이념, 그리고 지지기반”, 『현대정치연구』, 제7권 제1호,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2014.
- 지주형, 『한국 신자유주의의 기원과 형성』, 서울: 책세상, 2011.
- 진미정 외, 『탈북인의 사회관계망과 사회적 자본』, 서울: 학지사, 2009.
- 참여정부 대통령비서실, 『노무현 “한국정치 이의 있습니다”』, 서울: 역사비평사, 2009.
- 퍼트넘, 정승현 역, 『나 홀로 불링』, 서울: 페이퍼로드, 2009.
- 퍼트넘, 유석춘 외 역, “변영하는 공동체: 사회자본과 공공생활”, 『사회자본-이론과 쟁점-』, 서울: 그린, 2003.
- Keohane, Robert. “Global Governance and Democratic Accountability”, Rorden Wilkinson ed. The Global Governance Reader. London and N.Y: Routledge, 2005.
- 안희정 대연정, 남경필 “동의한다... 내가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일”, 『머니S』 2017년 2월 3일.
- 이재명 “홍의락, 권영진 대구부시장 제안 받으라...노무현 대연정 실현해야”, 『한국일보』 2020년 6월 24일.
- “민주노동당이 한나라당을 만날 때...”, 『한겨레21』, 2004년 7월 28일.
- “반환점 돈 노무현 정권, 한겨레 여론조사”, 『한겨레』, 2005년 8월 24일.
- “범좌 늘고 가정까지 ‘구조조정’/고실업시대의 사회상”, 『한국일보』, 1997년 12월 7일.
- “심사들린 盧, 꼬이는 黨-靑”, 『경향신문』 2004년 4월 16일.
- “운동권 대거 금배지 개혁입법 힘실릴 듯”, 『서울경제』 2004년 4월 16일.
- “20년 전 ‘힐튼 비디오’가 지금 나왔더라면”(칼럼), 『조선일보』 2024년 3월 5일.

- “② 반복된 위성정당 꿈수...비례성 무너지고 양당 독점 더 심해져”, 『경향신문』 2024년 4월 23일.
“[기자의 눈] 최영목/YS의 「공동책임론」”, 『동아일보』 1998년 5월 7일.
“[정동칼럼] 기후정치가 남긴 숙제”(칼럼), 『경향신문』 2024년 5월 1일.
최국희, 『국가부도의 날』, 장르: 드라마, 배급사: CJ ENM, 개봉: 2018년 11월 28일, 상영시간: 114분.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n.d.), 기록물목록, <http://www.pa.go.kr/>(검색일: 2024.05.14).

【 Abstract 】

Roh Moo Hyun's discourse against Winner-take-all Capitalism
: Social Capital and Politics of Reconciliation

Park Chan-seung

This study reveals that Roh Moo Hyun's politics of reconciliation was used as a strategy to increase social capital. The politics of increasing social capital through the politics of reconciliation hold great significance as a discourse against winner-take-all capitalism. For instance, there is the separation of the party and the government and the public election system in political reform. And, in coalition politics, it makes an attempt to form an alliance Yeollin Uri Party and Hannara Party. Roh's politics of reconciliation consist of solidarity, cooperation, and integration. Roh Moo-hyun attempted to reshape history and increase social capital. In addition, Roh's politics of reconciliation in the political sphere extends to the social sphere. Roh Moo-hyun has been characterised by different political actions in the political and social spheres, but these actions are interconnected.

During Roh Moo-hyun's political reforms, election-related restrictive legislation restricted campaigning and prevented candidates and voters interaction. Also, the attempt at coalition politics with the Hannara Party ended only with an idealistic political initiative without political support. However, it is meaningful that the public election system has been established in Korea and the political culture has changed more advanced than before. The present day, the discourse of winner-take-all capitalism is constantly strengthening, and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social media is reinforcing the polarization at the economic level and the tendency of the confirmation bias.

Key Words : Roh Moo Hyun, politics of reconciliation, progressive·reconciliation
discourse, social capital, winner-take-all capitalism

• 논문투고일 : 2024년 7월 19일 / 논문심사완료일 : 2024년 8월 10일 / 게재확정일 : 2024년 8월 17일